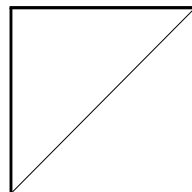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92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8. 25. (제 15 차)

의  
결  
사  
항

부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8. 25.

## 1. 의결주문

(주)부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 2. 제안이유

(주)부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은행법」에서 정한 지분증권 담보대출 취급사실 보고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1>

- 「은행법」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8호, 제6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1항, 제26조의2(권한의 위탁) 제1항, [별표3] 제37호,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2.(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제7조(과태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제1호,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항 제1호 가목,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금융감독원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2021.6.22.) 심의필

<별지>

(주)부산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가.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 직원에 대한 조치 : 2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80만원, 160만원 부과

조치대상자	조치사유	조치안
AAA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80만원)
BBB		과태료 부과 (160만원)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 사유 : 「은행법」에서 정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 대상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법적 근거
  - 「은행법」 제47조 제8호, 제69조 제5항 제7호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별표3] 제37호, 제31조, [별표4] 2.(허)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 나.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직원에 대한 조치 : 4명에 대해 주의

조치대상자	조치사유	조치안
CCC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주의*
DDD		주의*
EEE		주의*
FFF		주의*

\*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위임사항(「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29. ‘자’목)으로 금융위원회(은행과)에서 과태료(산정금액 : CCC, EEE 각 100만원, DDD, FFF 각 100만원) 부과 사전통지(2021.7.16. 및 7.23.)

※ (참고) 고객확인 의무 관련 과태료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2021.7.1.)

○ 조치 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

○ 법적 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의2 제3항, 제7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제13조, [별표]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46조, [별표3]

## 2. 조치사유

### 가.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 「은행법」 제47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주)부산은행 본점 ▲▲▲▲▲부 직원 AAA 등 2명은 2018.5.11.~2019.12.18.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6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33~112일 지연 보고

###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명세(6건)

차주명	대출취급일	담보주식명(취득비율)	대출 금액	담당자	보고일	지연 일수
(주)○○○○○○○○○○	2018.5.11.	(주)○○○○○○○○○○(94.5%)	100억원	AAA	2018.7.4.	54일
(주)●●●●●●●●	2018.11.20.	●●●●●(주) (100%)	40억원	AAA	2019.3.12.	112일
(주)◇◇◇	2019.3.26.	(주)◇◇◇◇ (97.2%)	70억원	BBB	2019.4.30.	35일
(주)◆◆◆	2019.9.6.	(주)◆◆◆ (93.75%)	15억원	BBB	2019.10.16.	40일
(주)□□□□	2019.7.26.	(주)□□□□ (36%)	300억원	BBB	2019.10.29.	95일
(주)■ ■ ■ ■ ■	2019.12.18.	(주)■ ■ ■ ■ ■ (100%)	27억원	BBB	2020.1.20.	33일
계	6건		552억원			

####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47조 제8호
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별표3] 제37호

#### 나.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가족인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거래요청자)으로부터 본인의 가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 (주)부산은행 ○○○금융센터 직원 CCC 등 4명은 2019.6.3.~7.12. 기간 중 ○○○ 등 6명 명의의 집합투자증권 계좌 6건(가입금액 : 11.6억원)을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가족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채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명세

일자	점포명	위반자 (직위)	가입상품 (개설계좌 종류)	명의인	가입금액	신청인
2019.6.3.	○○○ 금융센터	CCC (차장)	☞☞ Top2 B-1호	○○○	2.0억원	부친 ○○○
			☞☞ Top2 B-1호	○○○	3.0억원	배우자 ○○○
2019.6.18.	●●● 지점	DDD (부지점장)	☞☞ Top2 B-2호	○○○	1.0억원	배우자 ○○○
2019.7.4.	◇◇◇ 지점	EEE (대리)	☞☞ 레포플러스 B-2호	○○○	1.9억원	모친 ○○○
			☞☞ 레포플러스 B-2호	○○○	2.1억원	모친 ○○○
2019.7.12	◆◆◆ 지점	FFF (대리)	☞☞ 레포플러스 B-3호	○○○	1.6억원	배우자 ○○○
계	4개 점포	4명	6건	6명	11.6억원	-

#### < 관련법규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 관 계 법 규

### 1. 은행법 관련

#### □ 「은행법」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한 때
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때
3. 본점이 그 본점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도로 이전한 때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신설한 때, 은행이 국외 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국외사무소 등을 신설·폐쇄한 때
5. 상호를 변경한 때
6. 삭제
7.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9. 외국은행이 지점 또는 대리점을 동일한 시·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한 때
10. 그 밖에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 삭제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삭제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정관변경 등의 보고)** ① 은행은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등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2. 외국은행의 지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가. 외국은행의 정관, 상호 및 자본금에 변동이 있을 때
  - 나. 외국은행의 은행장이 해임되었을 때
  - 다. 외국은행이 합병 또는 해산되었을 때
3.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을 때. 다만,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때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할 때

**제26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별표 3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3]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26조의2 제1항 관련)

1. ~ 36. <생략>
37. 법 제47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38. ~ 62. <생략>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허.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제7호	200

2. 금융실명법 관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1. (생략)

2. 직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생략)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단서 생략)

2. ~ 5. (생략)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생략)

2. ~5. (생략)

②~③ (생략)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주의와 감독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500만원

## □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2008, 금융위원회 발간)

### 제1장 금융실명제 업무기준

#### II. 금융거래 형태별 실명거래 방법

##### 3. 대리인에 의한 거래

- 일반적인 대리의 경우 : 대리인(거래요청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함
- 가족에 의한 대리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하여야 함

## 3. 검사 및 제재 관련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

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가. 가중 사유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감경 사유

- (1) 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

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



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와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양정결과가 견책요구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 1. 삭제

2. 금융관련법규상 신용공여 금지위반 또는 한도초과 행위, 금융투자업자의 증권 임의매매·불공정거래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무자격모집위탁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한 행위

3. 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감독 및 검사 방해·거부·기피 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4.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한 사항에 대해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자율적인 제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관정과의 관계
-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2] 제재양정기준

유 형 \ 위법·부당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	해임권고(면직)	해임권고(면직)~문책경고(감봉)	직무정지(정직)~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해임권고(면직)	해임권고(면직)~문책경고(감봉)	직무정지(정직)~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금전적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해임권고(면직)	해임권고(면직)~문책경고(감봉)	직무정지(정직)~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당해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해임권고(면직)	해임권고(면직)~문책경고(감봉)	직무정지(정직)~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직무태만	해임권고(면직)	직무정지(정직)~문책경고(감봉)	문책경고(감봉)~주의적경고(견책)	주의적경고(견책)
기타 위법 (단순 절차 위반 등)	해임권고(면직)	직무정지(정직)~문책경고(감봉)	문책경고(감봉)~주의적경고(견책)	주의적경고(견책)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 I. 공통부문

### I-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유형①	5천만원 이하	견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유형②		주의 이하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

(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 3. 감사통할책임자 등 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 가. 영업점 감사통할책임자에 대하여는 금융질서문란, 사회적물의를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
- 나. 부·점장에 대하여는 감독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
- 다. 임원과 감사에 대하여는 재임기간중 관할 부·점장이 행위자로서 위반한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독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 4. 기관에 대한 조치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당해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에는 당해기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5. 가중 및 감경

- 가.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나.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다. <삭 제>
- 라. 단위부·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마.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법령해석 회신문(2016.12.19., 금융위 은행과)

질의요지	<p>○ 「은행법」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의 “8.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와 관련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분증권 담보취득 보고 후 해당대출의 기간이 만료 되어, 기한연기, 대환업무처리 시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로 보아 금융위원회에 재보고 여부</li> <li>2) 지분증권 담보취득 보고 후 지분증권의 추가 담보취득 없이 기 취득한 지분증권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로 보아 추가대출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고 여부</li> <li>3)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후취 담보취득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시기(대출을 취급한 때에 보고하여야 한다면, 예정으로 지분증권 취득을 보고하여야 하며, 실제 담보취득보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또한 담보취득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담보 취득하게 되는 경우 사전 변동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li> </ol>
회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분증권 담보취득 보고 후 해당대출의 기간이 만료 되어, 기한연기, 대환업무처리시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로 보아 금융위원회에 재보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대출 당시 보고한 만기일 등 대출관련 주요내용 변경이 발생하며, 최초 대출 당시에 비해 담보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담보가치가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한연기, 대환업무 처리 시에도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로 보아 재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li> </ul> </li> <li>② 지분증권 담보취득 보고 후 지분증권의 추가 담보취득 없이 기 취득한 지분증권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로 보아 추가대출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대출 당시 보고한 대출금액 등 대출관련 주요내용 변경이 발생하며, 최초 대출 당시에 비해 담보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담보가치가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존 담보취득한 증권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재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li> </ul> </li> <li>③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후취 담보취득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시기(대출을 취급한 때에 보고하여야 한다면, 예정으로 지분증권 취득을 보고하여야 하며, 실제 담보취득보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또한 담보취득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담보 취득하게 되는 경우 사전 변동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한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출을 취급한 이후에 실제로 담보를 취득하더라도 대출을 취급하는 시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출을 취급하는 시점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보고한</li> </ul> </li> </ol>

	<p>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담보 취득하는 시점에 추가 보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에는 은행에 대해 지분을 20%을 초과하는 주식담보대출을 엄격히 금지해 왔으나, '10년부터 20% 초과하는 주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은행이 이를 지체 없이 사후보고토록 하여 금융감독원이 1) 법령 저촉여부, 2) 주식회사의 본질 침해여부, 3) 은행의 건전한 경영 저해 여부, 4) 은행이 용자의 권익 침해여부를 심사토록 하는 사후감독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li> <li>○ 따라서, 은행이 지분을 20% 초과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그 사실을 보고한 이후에 대출규모 증가, 만기일 변경 등 당초 보고한 사항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재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변경된 사실이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li> </ul>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부산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8.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1명 ○ 감봉3월 2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 주의 및 과태료 2명 ○ 주의 4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 TOP2 펀드 및 ♡♡ 레포플러스 펀드 불완전판매

부산은행은 2019.6.3.~7.18. 기간중 ♡♡ Top2 밸런스 9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Top2 펀드”) B-1호 및 B-2호, ♡♡ 레포 플러스 9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레포플러스 펀드”) B-1호, B-2호, B-3호를 ○○○○금융센터 등 67개 영업점을 통하여 일반투자자 218명을 상대로 총 226건 (가입금액 : 〇〇〇.〇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 금지 등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21.3.24. 개정 시행 前, 이하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 (가) ♡♡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에서는 ♡♡ Top2 펀드 및 ♡♡ 레포플러스 펀드 판매를 검토 하면서 상품설명서로 활용할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상기 펀드의 상품제안서에 펀드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고위험 펀드인 ‘♡♡플루토 FI 펀드’\*에 대하여 ①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 펀드로 왜곡 기술 하고, ② ♡♡플루토 FI 펀드가 리스크가 큰 메자닌 투자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영업점 직원들이 펀드 투자권유시 설명서로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 부산은행에서 판매한 ♡♡ Top2 펀드 및 ♡♡ 레포플러스 펀드(이하 “♡♡펀드”)는 모두 안정성을 추구하는 Repo 펀드(편입비중 : 38~40%)와 고수익을 추구하는 ♡♡ 플루토-FI 펀드(편입비중 : 60~62%)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상기 ♡♡ 펀드의 리스크는 펀드 자산의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 플루토-FI 펀드에 집중되는 구조임

참고로 ♡♡펀드의 제안서에서는 ♡♡ 플루토-FI 펀드의 운용전략을 “Fixed Income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①사모사채(A등급 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구조화채권), ②ABS(매출채권, 재고자산 유동화 증권), ③인수금융에 참여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제시하고 있음

67개 영업점 직원들이 2019.6.3.~7.18. 기간중 일반투자자 218명을 상대로 총 226건(가입금액 : 〇〇〇.〇억원)을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왜곡 또는 누락 설명하였음

### ① 중요사항에 대한 왜곡 설명

◆◆◆◆부는 다음 ㉠~㉡와 같이 ‘♡♡펀드’ 및 ♡♡펀드의 리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투자대상 자산인 ‘♡♡ 플루토-FI 펀드’에 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㉑ 상품제안서에는 자산의 60~62%를 차지하는 ♡♡ 플루토-FI 펀드의 운용전략을 설명한 첫 페이지에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라고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으나,

♡♡ 플루토-FI 펀드의 세부적인 운용전략에는 동 펀드가 ①TRS 등 고위험의 레버리지 투자 방식을 통한 수익성 확대 추구(A등급 채권), ②불확실한 미래수입을 담보로 한 고위험 투자(부동산금융 구조화채권), ③신생기업의 매출채권 또는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재고자산 담보대출에도 투자될 수 있다는 사실(ABS), ④고수익 추구를 위해 리스크를 감내하는 투자를 진행한다는 사실(인수금융) 등 중위험이 아닌 “고위험이 내재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서가 다수 존재하여,

상품제안서상의 기재내용을 리스크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경우 ♡♡ 플루토-FI 펀드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라는 기재내용이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㉒ 실제 ♡♡자산운용에서 작성한 ♡♡ 플루토-FI 펀드 D-1호(모펀드)의 운용제안서에는 동 펀드가 ‘1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었으나, ◆◆◆◆부는 ♡♡펀드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모펀드의 운용제안서를 받아보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㉓ 상품출시 실무담당자는 동 펀드의 부동산, 매출채권 ABS 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여 ♡♡자산운용에 펀드의 실질적인 투자처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자산운용은 위탁판매계약서(세부업무 협약서)상 자료 제공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부는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자산운용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단순 구두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펀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않았음

㉔ 또한, 부산은행이 ♡♡펀드 출시를 검토하기 수개월 전인 2019.2.1.~4.9. 기간중 ♡♡ 플루토-FI 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는 ♡♡ 플루토-FI 1Y 펀드 1호~8호가 타 금융회사에서 판매되었는데,



동 펀드의 상품제안서에서는 ♡♡ 플루토-FI 펀드에 대하여 부산은행이 판매한 ♡♡펀드가 편입하는 ♡♡ 플루토-FI 펀드의 운용전략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하면서도 펀드의 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제시하고 있었음에도

확보가능한 시장정보의 입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음\*에 따라 ♡♡ 플루토-FI 펀드가 중위험이 아닌 고위험 펀드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당시 ◆◆◆◆부에서는 신규 펀드상품 발굴 및 펀드상품 시장동향 파악 목적으로 전문직원 1명을 채용한 상태(근무기간 : 2019.1.21.~11.14.)였던 점을 감안할 때, 동 인력을 활용하여 ♡♡ 플루토-FI 1Y 펀드의 상품제안서를 입수할 수 있었음

㉞ 한편, 부산은행이 ♡♡펀드 판매를 결정시에 동 펀드의 위험등급이 4등급(보통위험)인 점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였으나,

♡♡자산운용이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거부한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자산 운용 측의 모호한 구두 설명만으로는 편입자산의 60~62%를 차지하는 ♡♡ 플루토-FI 펀드가 중위험자산에 해당한다는 상품제안서상 기재사항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나아가 상품제안서상 제시된 고위험 요소를 감안시 ♡♡ 펀드의 상품제안서에 함께 제시된 4등급(보통위험) 분류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자산운용이 제시한 4등급(보통위험) 분류를 그대로 수용하였음

\* 4등급(보통위험) 요건 :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50% 이상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

위와 같은 검토 소홀로 ◆◆◆◆부는 펀드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이 제시한 4등급(보통위험) 분류를 그대로 믿고 행내 게시판에 ♡♡ 플루토-FI 펀드(편입비중 : 60~62%)를 “중위험 중수익 추구 자산운용”이라고 기술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절대 수익률 추구형 펀드”라고 기술하는 방식으로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왜곡된 내용을 판매직원들에게 그대로 요약 안내하였고,

그 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인 ‘♣♣ 플루토-FI 펀드의 리스크’를 중위험으로 왜곡 기재한 상품제안서(“판매사 사내한” 명시)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상품설명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판매직원들은 동 상품제안서에 기초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설명함에 따라 중요사항을 왜곡 설명하였음

## ②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부는 다음 ㉠~㉡와 같이 ‘♣♣펀드’ 및 ♣♣펀드의 리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투자대상 자산인 ‘♣♣ 플루토-FI 펀드’에 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 부산은행이 판매한 ♣♣펀드의 투자신탁 계약서에는 펀드의 투자전략에 ‘메자닌 투자 전략’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내규상 투자신탁 계약서(약관)의 주요 내용을 상품설명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투자신탁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펀드의 주요투자전략으로서 펀드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메자닌 투자전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 ♣♣자산운용에서 작성한 ♣♣ 플루토-FI 펀드 D-1호(모펀드)의 운용 제안서에는 ①Fixed Income 운용전략 뿐 아니라 ②메자닌 투자전략(IB Deal 운용전략)을 투자전략의 양대 축으로 제시\*하고 있고, 각각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동 운용제안서를 입수했다라면 메자닌 투자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 ♣♣ 플루토-FI 펀드 D-1호 운용제안서(총 43매) 중 투자전략 부분이 23매이며, 메자닌 투자 전략 설명에 10매, Fixed Income 투자전략 설명에 13매를 할애

◆◆◆◆부는 ♣♣자산운용이 위탁판매계약서상 자료제공 조항에도 불구하고 ♣♣ 플루토-FI 펀드 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자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자산운용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단순 구두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메자닌 투자 전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와 같은 검토 소홀로 ◆◆◆◆부는 리스크가 큰 ‘메자닌 투자전략’과 관련한 설명 일체가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배포하여 이를 상품설명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판매직원들은 동 상품제안서에 기초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설명함에 따라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였음

#### (나)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차장 ○○○는 2019.6.7.~6.17. 기간중 일반투자자 2명을 상대로 ♠♠ Top2 펀드(B-1호, B-2호) 총 2건(가입금액 : 0.0억원)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채 투자권유를 함에 따라 적합성원칙을 위반하였음

#### (다)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차장 ★★★은 2019.6.27. 투자자 ♠♠♠를 상대로 ♠♠ 레포플러스 B-1호 1건(가입금액 : 0.0억원)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설명하거나 ‘원금을 부산은행에서 책임져요?’ ‘3.4% 주는 건 틀림없다?’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고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음

#### (라)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舊 「자본시장법」 제71조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에도

♣♣♣♣지점 부지점장 ♣♣♣은 2019.7.1. 및 2019.7.10. ♠♠ 레포플러스 펀드 2건(가입금액 : 0.0억원)을 판매하면서 동일 영업점내 투자권유자문인력(○○○대리)으로 하여금 전산상 판매자로 대리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없이 판매하여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계법규 >

1. 舊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71조
2. 舊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 및 제53조

## (2)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부 직원 ○○○ 등 2명은 2018.5.11.~2019.12.18.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6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계법규 >

1. 「은행법」 제47조
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6조의2, [별표3] 제37호

## 나. 주의사항

###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가족인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거래요청자)으로부터 본인의 가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금융센터 직원 ★★★ 등 4명은 2019.6.3.~7.12. 기간중 ▲▲▲ 등 6명 명의의 집합투자증권 계좌 6건(가입금액 : 00.0억원)을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가족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채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계법규>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 다. 개선사항

### (1) 사모펀드 판매 시 투자권유 고객수 관리체계 불합리

사모펀드 판매 시 투자권유 고객수가 49인을 넘지 못하도록 전산 통제하고 있지 않아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가입의사가 없거나 가입을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고객에게 추가로 투자 권유하여 결과적으로 50인 이상에게 투자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모상품의 경우 투자권유 대상 고객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등 50인 이상에게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람

## <관계법규>

### 1.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8항

#### (2)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담당자 전산인자 체계 불합리

금융투자상품 판매 서류상 권유자(판매자), 전산입력자(OP), 실명확인자 등 각각의 업무처리별 담당자 정보가 전산인자 내용과 수기 기재사항 간에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각각의 업무별로 실질적인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산인자 되도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전산인자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 (3)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전 협의 절차 미흡

금융소비자보호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기 전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신상품 숙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보호부서가 협의의견을 '적정'으로 승인하고 있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 협의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 [예시] A펀드 : 2018.9.13. 출시 후 2018.9.14. 협의 완료

B펀드 : 2019.6.3. 출시 후 2019.6.4. 협의 완료

\*\* 점검 체크리스트상 신규 상품 출시 3일 전까지 판매 직원이 상품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

신규 금융투자상품 출시 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상품 내용 및 위험, 판매 절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매 직원이 상품 관련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부의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4) 펀드 출시 사전검토기준 운영체계 불합리

사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를 상품설명서로 이용하고 있어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판매사로서 설명의무 이행의 관점에서 본점 실무 부서 차원의 사전검토가 중요함에도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전검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규 펀드 출시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심의기준으로 삼고 있는 평가표가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어 심의의 실효성 확보가 의문시되며,

펀드 출시 최종의사결정시 전결권자에게 약식보고만 이루어지고 있어 상품의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결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펀드 신상품 출시를 위한 사전검토, 심의 및 출시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심의기구의 심의 기준, 전결권자에 대한 보고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특수은행검사국
연락처	02-2100-2676	02-3145-7205